

임금·조건 후퇴 없는 8+8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이 표출되다

잔업·특근 거부 투쟁을 즉각 재개하라

김성락 집행부가 가져온 8+8 잠정합의안이 66.6퍼센트의 반대로 부결됐다. 조합원들의 불만은 매우 깊고 컸다. 찬성률로 치면 역대 최악이다. 특히 화성 공장에선 무려 84퍼센트가 반대표를 던졌다. 압도적이다.

이 같은 결과의 근거에는 8+9(8+9.33) 도입 이후 강화된 노동강도와 단협 개약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예컨대, 조합원들은 UPH-UP에 상당히 민감하다. 지난해 집행부의 양보교섭 반대를 내건 교섭장 봉쇄 시위가 지지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활동가들의 노력도 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난해 '현장공투'는 항의 시위를 벌여 양보교섭을 막았고, 조합원들의 지지 속에 대의원대회에서 양보안이 폐기됐다. 올해도 교섭장 앞 시위가 조직됐다. 특히 조립공투위가 적극 부결을 선동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8+8에 대한 지지와 열망이 커졌다. 총회 결과는 이 점을 명백히 보여 준다.

김성락 집행부는 대의원대회를 앞두고서야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현장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특보를 발행했다.(5월 4일자 <함성특보>) 여기서 집행부는 "물량보전을 하지 않으면 임금 30만 원 손실", "회사 생산계획 미달성 시 성과급에 대한 우려", "회사 생산계획 미양산시 해외공장으로 물량이관" 등을 말했다. 한마디로 생산량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임금 삭감, 고용불안, 성과급 미지급 등이 될 수 있다고 압박을 한 것이다.

이는 총회에서 드러난 조합원들의 열망을 진지하게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답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생산량 보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주문을 외우며, 현장의 열기를 식히려 한 것이다.

그러나 기아차지부는 8+9(9.33) 전환 전까지는 노동시간 단축 시 생산량 보전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조합원들은 임금·노동조건 후퇴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는 열망을 보여 줬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투쟁 회피를 위한 김성락 집행부의 비겁한 변명을 걷어차고 조합원의 열망을 실현할 강력한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생산량 보전은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김성락 집행부는 생산량 보전을 8+8의 대전제로 말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임금도, 고용도 지킬 수 없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과연 생산량 보전은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것인가?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능한 일인가?

주간2교대 투쟁은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장시간 근무로 우리를 쥐어짜 배를 불러 온 사측에 맞서 우리의 몫을 되찾아 오는 투쟁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주간2교대 시행을 둘러싸고 사측과 갈등이 첨예했다.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

화, 노동유연화(와 비정규직 차별) 없는 8+8 쟁취는 노동운동이 견지해 온 중요한 원칙이었다.

이 요구를 쟁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정몽구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에만 10조 5천억 원이나 늘어 무려 112조 6천억 원이나 되고, 올 초 그가 챙겨간 주식 배당금만 772억 원이 넘는다. 도대체 왜 이런 부를 놔두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양보해야 하는가?

더구나 기아차지부는 3만 5천 조합원을 가졌고, 공장을 멈추면 정몽구의 이윤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막강한 잠재력이 있다.

문제는 김성락 집행부가 이런 힘을 사용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쟁

을 회피한 채 협상장 안에서 문제를 풀려해서는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2012년 8+9 합의 당시 3무 원칙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 바로 금속힘이다. '집행부 해 보니 현실은 다르더라'는 생각이라면, 뭐 하러 집행부가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측에 정면 도전하기를 그렇게 겁내서야 조합원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 총회 결과는 생산량 보전을 전제한 합의가 조합원들의 요구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줬다. '온전한 8+8 쟁취' 투쟁에 진지한 활동가라면, 생산량 보전 논리를 깨고 3무 원칙을 움켜쥐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

투쟁의 대안을 구축해 나가자

조합원들은 총회에서 '온전한 8+8 쟁취'에 대한 열망과 자신감을 보여 줬다. 이런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 성과를 내려면, 투쟁이라는 대안을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에도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집행부가 투쟁을 조직하지 않은 채 시간을 질질 끌며 기층의 열기를 식히고

다시 비슷한 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들이밀곤 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감해 했고, 결국 부족한 합의안이 통과되곤 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8+8 시간 근무 투쟁을 재개하는 것이다.

부결 투쟁에 앞장섰던 활동가들의 책임 있

는 행동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현장공투본'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8+8 시간근무 투쟁 재개', '8+8 투쟁과 임단투를 분리한다'는 결정은 의미 있다. 이런 결정을 대의원대회에서 관철시켜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3무 원칙을 확실히 하고, 조합원들의 열망을 관철시킬 투쟁을 키우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협력한 광주지회 집행부 징계해야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집행부가 지난 4월 8일 반(反)노동자 정당인 새누리당 광주시당과 '100만대 공장 증설' 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권 심판'을 외치며 총선 투쟁을 벌이고, 수많은 노동자들과 청년·학생·서민이 새누리당에 불만을 터뜨린 바로 그 총선 시기에 말이다!

이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들은 이 소식을 뱅뱅 띄우며 '기아차 노조와의 협력' 약속을 선거에 활용했다.

광주지회 집행부는 '100만대 공장 증설'에 눈이 멀어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 준 꼴이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고, 실용주의적으로 노동대중의 염원을 저버린 철

딱서니 없는 짓이다.

육중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이 소식을 접했다면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부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난 3년간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노동자 공격은 악독했다. 80만 민주노총의 수장 한상균은 감옥에 갇혀 있고 한규엽, 최정명 동지는 1년 동안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락 집행부는 지금까지 광주지회 집행부의 배신적 일탈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심각한 문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지침을 위반하고 기아차지부 전체 조합원의 명예에 먹칠을 한 광주지회 집행부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김성락 집행부의 '비정규직 연대기금' 추진 정규직 양보는 대안이 아니다

김성락 집행부가 이번 대의원대회의 주요 안건으로 '나눔과 연대사업 기금 조성'을 상정했다. 안건 자료집에는 제목만 나와 있고 내용은 전혀 없다. 대의원들이 사전에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집행부의 마땅한 책무일 텐데 말이다.

미뤄 짐작컨대, 얼마 전 <한겨레>가 보도한 기아차 집행부의 "정규직 임금 나누기" 사업이 이번 연대기금 추진의 내용일 듯하다. 우리가 집행부에 확인해 봤을 때, 한 간부는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기금을 조

성하자는 내용'이라고 했다. 기금 조성방법은 '조합원이 우선 50퍼센트를 결의하고 사측에 50퍼센트를 요구하자'고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는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민주노총의 조직된 노동자들은 마땅히 비정규직 차별에 적극 맞서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단결을 도모할 것인가다. 노동자들끼리 임금을 나누자는 주장은 오히려 '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에서 덕을 봤다'는 우파의 분열 논리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정규직의 '고임

금'을 깎아 전체 임금을 하향평준화 하려는 공격에 단호히 맞서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임금을 나눌 게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성과급) 지급을 위해 함께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우리끼리 임금 몫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저들의 몫을 빼앗아 우리의 임금 몫을 늘려야 한다. 활동가들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을 반대하며, 비정규직 성과급 동일 지급,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이동우 동지의 복직 등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세월호 진실규명 운동에 연대하자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2주기였다. 진실 규명을 향한 염원이 모여들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1만 2천 명은 한 마음으로 "기억하자! 행동하자!"를 외쳤다.

세월호 참사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비열한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보여 줬다. 이는 계급의 문제다. 조직 노동자들이 진실규명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지금 '416연대'는 특조위 강제 종료 시도에 맞서며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도 호소하고 있다. 각 노조 교육 시간에 초청을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 세월호 문제로 교육할 의사도 밝히고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기아차 노동자들이 세월호 투쟁에 연대를 결의하자!

신입사원 차별 이중임금제 반드시 시정하자

신입사원 이중임금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급속노조는 신입사원에 대한 우선적 임금 공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성락 집행부는 기아차 신입사원들이 받고 있는 임금 차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8+8 잠정합의안을 가져와 총회에 붙였다. 이 때문에 '신입사원 이중임금제 철폐 대책위원회'가 잠정합의안 부결을 선동하는 등

조합원들의 원성을 샀다.

김성락 집행부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대의원대회 약속조차 어겼다. 54년차 대의원대회에서 신입사원들에게 차별 적용되고 있는 심야보전 수당, 호봉, 사내하청 근속 인정 등을 요구하는 안건이 발의됐고, 이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됐다. 지부장은 '신입사원 이중임금제 철폐 대책위원회'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지금 신입사원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

하다. 신입사원에 대한 임금 차별을 허용하면, 결국 전체 조합원의 조건이 공격받을 수 있다. 미국 전미자동차노조 지도부가 신입사원 임금의 절반을 깎는 이중임금제를 수용한 것이 전 공장의 저임금화를 막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이중임금제 철폐를 위한 신입사원들의 요구가 울곧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좌파 대의원들이 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이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 당선인은 민주노총 전략 후보였고, 급속노조가 박근혜의 '노동개혁' 저지 투쟁의 연장선에서 이 후보를 지원했다.

박근혜는 울산에서 세계 한방 맞은 데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윤 당선인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급속노조는 오는 20일까지 '정치탄압, 표적-기획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조합원 서명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기아차지부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http://wspaper.org>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십시오.

문의 : 김우용(010-3092-9003)